
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

2023. 2. 3

	<div></div> <div></div> <div>목 차</div> <div></div> <div></div>	
<hr/>		

1. R&D·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1
2.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2
3.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확대 4
4.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6
5.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7

1

R&D·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

□ 관련법령

- 조특법 시행령 제6조의4, 제9조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기업의 R&D 및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차등 운영 중

< R&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현황(%) >

	R&D세액공제				통합투자세액공제(시설투자 등)			
	당기분			증가분	당기분			증가분*
	중소	중견	그 외		중소	중견	그 외	
일반연구개발	25	8~15	2	중소 50, 중견 40, 그 외 20	10	5	1	3
신성장·원천기술	30~40	25~40	20~30		12	6	3	3
국가전략기술	40~50	30~40	30~40		16	8	8	4
중견 적용범위	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				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			

*(추가공제한도) 기본공제액의 200%

-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R&D 및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세제지원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

□ 건의내용

- R&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매출액 2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

□ 관련법령

- 조특령 제21조 제4항 2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별표6의2

□ 현 황

-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
중소 16%, 대·중견 8%를 법인세에서 공제*
 - (국가전략기술 범위) 총 3개 분야(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) 31개 기술에
대한 사업화 시설(반도체 19개)
- 최근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대
25%(대·중견 15%)까지 세제지원 강화방안 발표
 - *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발표('23.1.3, 기재부 보도자료)

□ 문제점

- 정부는 국가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
지만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IDM¹⁾에서 수행하는 첨단 및 전공정
기술에 집중돼 있어 중소·중견기업은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
 -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관련 시설 19개 중 후공정* 분야는 1개로
대부분 전공정(파운드리, 팹리스)에 집중
 - * (패키징) WLP, PLP, SiP, 3D,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/2.5D/3D 패키징 제조기술
 - 지정되어 있는 후공정 분야도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첨단기술로
중견기업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움

1) IDM(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) : 종합 반도체 기업(삼성, SK 등)

- 반도체 중견기업 대부분 소부장 기업으로 핵심기술*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
 - *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기업(43개) 중 반도체 분야 중견기업 6개사
- 반도체 산업의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기업 육성 필요

□ 건의내용

-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범위 확대
 - ⇒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술 추가
 - (ex. 시스템 반도체 등 제품 패키징 및 테스트 양산기술 포함)

3

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

□ 관련법령

-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함

*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

-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기업승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전·사후 요건 등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

-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업종 자체가 한정*되어 있어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영위해왔음에도 기업승계 시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

* 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)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

-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16개(대분류 기준), ②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17개

<현장 애로 사례>

- ① A사는 인력도급 관련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하며 경비, 청소, 시설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타사업체와의 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통해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라인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음(표준산업분류상 "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74~75)"에 해당)
 - 그러나 주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"소독,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(74220)"가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(단, "산업설비,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(74212)", "고용알선업(75110)" 등 일부 부업종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)으로, 유사·동종사업("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(7421)", "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(751)" 등)을 영위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에 어긋남
- ② 리조트에 속해있는 골프장은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가업에 해당하지만, 일반 골프장의 관광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

- 동종·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
- 특히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과 같은 전통산업은 대분류 내 전체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, 서비스업은 중분류, 세분류 등으로 업종을 세분화하여 한정된 업종만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

<제조업-서비스업 관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예시>

표준산업분류(대분류 기준)	가업 해당 업종
광업(05~08)	광 업 전체
제조업(10~33)	제조업 전체 (단, 직접생산제품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세부요건 충족 필요)
건설업(41~42)	건설업 전체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0~73)	연구개발업(70), 광고업(713)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(714) 등 5개 업종
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74~75)	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(7421),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(751),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(7531) 등 7개 업종
교육서비스업(85)	유아 교육기관(8511), 사회교육시설(8564) 등 4개 업종

- 4차 산업혁명, 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세제·금융·재정 등 지원 제도의 차별을 해소하고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「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」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가업을 폭넓게 정의할 필요
 - *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(120대 국정과제, '22.7월)
-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백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이 중·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

□ 건의내용

-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
 - 전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제외 업종*만 별도 규정
 - *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

4

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

□ 관련법령

- 상증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20%를 할증평가(단, 중소 및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중견 제외)하여 상속세 부과

* (개정안)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

- 상속세 및 증여세 실효세율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고려할 경우 최고 60%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

* 상속세 최고세율 50%,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%

- 할증평가는 미국, 영국, 독일, 일본 등 주요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기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

-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받은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의 최대 60%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어려움

* 기업승계시 애로사항 : **상속·증여세 등 조세부담 68.8%**, 복잡한 지분구조 11.1%, 엄격한 기업승계 요건 7.2%순 (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)

- 특히, 상장기업은 평가기준일*에 비해 실제 주가가 낮아진 경우에도 평가액만큼의 주식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승계 후 최대주주의 지분을 하락으로 경영권 위협의 우려가 존재

*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(평가기준일)의 시가(時價)에 따름 (상속세 및 증여세법 §60)

□ 건의내용

-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또는 전체 중견기업 제외

□ 관련법령

- 상증법 제71조,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8조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금전, 유가증권, 토지 등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*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나, 비상장주식은 담보에서 제외되어 비상장사는 연부연납 제도 활용에 애로

* 금전, 유가증권, 납세보증보험증권, 납세보증서, 토지, 건물, 공장재단, 광업재단, 선박, 항공기, 건설기계 등

- 비상장 중견기업(83.4%)*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 마련을 위해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게 되어 경영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

* 중견기업 현황('21년 결산기준) : **비상장 4,555개(83.1%)**, 코스피 453개(8.3%), 코스닥 467개(8.5%), 코넥스 5개(0.1%)

- 비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납세담보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부담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조세 정책의 일관성 결여

-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한 것에 착안하여 환가성에 대한 평가 및 신뢰가 있는 기업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

* 기획재정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(홍석준의원안, 의안번호 제2104118호)

□ 건의내용

- 기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